

만18세 선거법 개정에 따른 정치교육에 대한 논의 Discussion on politic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18-year-old election law

구수경^{1*} Koo Su-Kyung¹ (koosk@hanmail.net) / ORCID: 0000-0003-2931-1964

¹한국교원대학교 제1대학 교육학과 강사(Lecturer, Dept. of Education, KNUE)

국문초록

무릇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느 한쪽으로 모두 치우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현장의 정치화가 가속화되어 편가르기를 통해 교육의 장이 교우관계 형성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 사고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아 왕따현상이나 님비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셋째, 정치적 성향의 행위가 자칫 성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념과 사상이 고착화되어 자신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교육현장이 정치의 현장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립화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섯째, 대학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어 학업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지고, 개인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 제 어: 선거법, 정치교육, 만18세, 학교교육,

Key words: Election law, Political education, Age 18, School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만18세 선거연령 개정에 따른 학교교육 현장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연령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최근 선거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청소년 유권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 18세 청소년들은 4·15총선에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청소년 유권자는 약 50만 명, 투표권을 갖게 된 학생은 14만 명에 이르며, 만 18세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도 가능해졌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능력 부족이나 미성숙, 또는 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범위만 사례의 발생, 교사들의 정치적 이념 편향성,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특정 정당의 유불리 등 국회 의석수 확보와 관련한 계산까지 만 18세 선거권을 놓고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18세 이상이 선거연령 기준이며,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만 19세로 가장 높은 선거연령을 기준으로 두고 있었다. 일본도 이미 2015년에 18세 선거권을 도입하여 정치교육 자료를 주고 연간 수업 시수를 의무적으로 배분하고 있다(신경희, 2020).

현재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서 선거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학생들이 선거에 객관적으로 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으로 투표에 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는 탐색연구를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청소년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따른 찬반 입장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학교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선거법에 대한 이해

1. 선거의 유래와 의미

고대 아테네에서 전쟁이나 지도자 선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판결 등을 목적으로 민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거제도는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거의 사라졌으나 근대에 접어들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의회제도(parliamentary system)가 확산됨에 따라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네 가지 유형이 있으나 그 외에도 제한선거(납세액, 문해력, 성별, 인종, 학력, 종교, 혼인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투표권 부여), 차등선거(거주지역, 재산정도, 납세액, 성별, 학력 등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3표, 2표 1표 등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 공개선거(투표의 내용을 제3자(참관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간접선거(투표인단을 선출하여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통령선거 등)의 유형이 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이유는 다수 시민의 뜻을 대표자를 통해 시행하도록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자는 시민의 뜻에 의해 선출되기 보다는 시민을 억누르면서 선출된 형식을 취하는 독재자를 선출하기도 하기도 하고, 정보의 통제와 시민의 우민화를 통해 자신을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또한, 대중의 뜻에 부합하는 무분별한 공약과 과도한 복지제도의 추진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사례도 다양한 국가들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더욱더 선거를 통한 지도자의 선출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2. 선거법

선거 제도(Electoral system)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 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근대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실 하에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조작도구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의 의사로 대표시킬 것인가 하는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중요성이 있으며, 의회제도 운용의 성패는 선거의 방법 여하에 달려 있다고 여겨진다(위키백과).

Ⅲ. 만 18세 선거연령에 대한 주장들

1.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들

이 장에서는 먼저 선거법 개정에 대한 토론에서 나타난 강민진/이종배 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일단 참정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참정권이 라는 것을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보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여야 하고요. 이미 OECD 국가 중에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18세 또는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8세인 나라도 16세로 낮추자라는 여론이 대세인 지금 2019년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18세 선거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고령층은 정치적으로 과대대표 되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과소대표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되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각에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라든가 명분을 대는데 저는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으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라고 말하는 것만큼 큰 위선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정치권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청소년들의 의견과 또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한계를 보여왔던 것에 대해서 성찰의 먼저 해야지 선거권을 주지 않으려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앵커] 이종배 대표께서는 지난 2일입니다. 한국교총 등과 함께 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섯잖아요. 이유가 뭐죠?

Q. 만 18세 선거권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이게 지금 선거법의 워낙 큰 쟁점 때문에 묻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연령이 18세가 허용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 고3에게 투표권이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3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교실은 그야말로 정치판이 될 것입니다. 정치판이 되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선거법에 보면 정당 가입도 허용하고 있고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거철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말 표만 되면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 교문 앞에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표를 구걸한다든지 아니면 교실에서 각 학교에 정의당 지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 지부가 생겨서 고3 학생들, 고등학생들 정당 가입시키고 그리고 그 정당 가입된 우리 고3 학생들 교실에서 특정 후보를 선전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미래 꿈을 위해서 교실에서 학업에 매진해야 될 우리 애들이 그야말로 정치판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학업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저희가 학부모 단체인데요. 그런 우려들이 매우 크고 학부모들이 이걸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학교현장에 교실에 정치운동, 선거운동 등이 진행이 되면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학업을 등한시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정의당 지부가 학교에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들으신 강민진 대변인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Q. '교실 정치화' 우려에 대한 입장은?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아니요, 법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저희 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또 대한애국당 이렇게 다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걸 저는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칙을 둘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과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그게 딜레마인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고3에게 어떤 투표권을 주는 게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비판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 우리나라는 어떤 대입경쟁이 워낙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오면서 계속 대입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충분히 올바른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게 옳겠지 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학업을 등한시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턱대고 지금 통과시킬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하고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또 선거운동에 참여하려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정보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의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 제기하시죠.

Q. 대부분 고3 학생, 입시 공부에 집중할 나이?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거꾸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인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시간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서 35시간 근무제 논의할 때 지금 52시간제 도 논란이 될 만큼 노동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성인들도 여유시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정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3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비정상적인 대학입시 경쟁을 끝내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돌려주기 위해서 1살이라도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18세 선거권이 지금 너무나 절실한 이유입니다. 재작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당시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과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박근혜 퇴진운동을 함께 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여유가 없는 와중에도 우리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지금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치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앵커] 후보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Q. 만 18세 청소년, 선거권 행사 역량 평가는?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3.1운동에 유관순 열사가 옥중

에서 돌아가셨을 때가 만 17세였습니다. 그리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가 돌아가셨던 건 만 15세였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민주회는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이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더욱더 청소년들은 공부만 해야 된다, 청소년들은 정치에 나서면 안 된다는 그런 편견이 더욱더 강했던, 과거일수록 더욱더 강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이미 활동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치적 주체로 충분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게 지금 강민진 대변인의 얘기인데 이종배 대표님, 원래는 만 20세 이상에게 주어지던 선거권이 2005년에 만 19세로 낮춰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만 18세로 2살을 아예 더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었는데 교실 혼란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만 19세에서 더 내리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2005년 이후 14년이 흘렀고 강민진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의 역량도 그만큼 많이 성장했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사실 우리 청소년들의 역량을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역량은 충분히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유관순 열사를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리고 OECD 국가를 예를 드시는데 OECD 국가에 보면 16세에 투표권을 주는 나라도 있고 17세, 18세, 19세 다양합니다. 왜 그러면 각국들이 다양할까 그 투표연령을 두는 게. 그만큼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이게 기계적으로 OECD 국가의 투표연령이 낮으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비약적이고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절한 투표연령이 몇 살이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18세나 17세나 19세나 이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3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제를 개편해서 18세가 만약에 대학생이 된다. 그러면 저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18세가 지금 고3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 이게 어떤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곳에서 합법적으로 고3 학생들을 정당에 가입시킬 수도 있고 선거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고3 학생들을 정당 가입시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당은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에 옹호하는 행사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선거법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쨌든 고3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3은 정말 수능이 7개월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이 4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법이 통과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수능 7개월 남고 그다음에 수시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1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중하고 중요한 시기에 선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디 정치인 따라다니고, 과연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앵커] 이종배 대표께서 조금 전에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성소수자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찬반 논쟁이 뜨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자칫

부정적으로 비취질 경우에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의 행사에 이렇게. 동성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행사도 갈 수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한국식 학제' 문제와 연관...어떻게 보나?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만 18세가 된다는 명백한 가짜뉴스를 일부 정치권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선거연령이 만 18세인 나라들 중에서 한국과 비슷하거나 또는 오히려 더 늦게 고교를 졸업하는 나라들이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체코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고3 학생들이 만 18세 되면 투표를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평균 17세나 18세에 졸업을 하지만 16세부터 선거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투표하는 고등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마치 외국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만 고등학생이 투표하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만 18세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가짜뉴스를 정치권에서 이렇게 퍼뜨리고 있으니까 저는 매우 유감이고요.]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이걸 바로 반론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앵커] 말씀하시죠.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교복 입고 투표한 나라도 극소수가 있습니다. 극소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세에 투표권을 주고 있지만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환경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대입이라는 부분이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대입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줬을 때 학업을 등한시하고 어떤 교실의 정치화가 될 수 있다는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를 해야지 자꾸 외국의 사례를 자꾸 끌어들이면 이게 본질이 호도될 수 있다.]

[앵커] 학제가 지금 문제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학제가 바뀌지 않는 한 만 18세로 낮춰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Q. 병역·납세 의무 기준 만 18세...형평성 논란?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3한테 투표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저는 선거연령 하향하는 부분의 본질이라고 보고 고3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너무 급진적으로 통과시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말씀하시죠.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만 18세 선거권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1980년부터 신민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18세 선거권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제일 오래된 뉴스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도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 18세에 선거권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자꾸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이게 시기상조라고 하면 이걸 그냥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안 하고 싶다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순히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세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기성세대의 태도 변화를 바라기 때문이고요. 청소년들이 그냥 공부해야 할 나이만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면서도 동시에 이 나라의 시민으로 대우받고 존중받는 나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바꾸고 싶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충분히 어떤 청소년들의 참정권이라든지 어떤 주체 의식이라든지 여러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제가 계속 어떤 얘기의 반복인 것 같은데요. 그게 고3 몇 개월만 있으면 입시가 끝나고 대학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더라도 학생들한테 충분히 참정권도 보장이 되고 말씀하신 이 사회의 주체로써 존중을 할 수 있다. 왜 굳이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고3 우리 학생들한테 투표권을 줘서 학업을 등한시하게 하고 그다음 교실을 어떻게 정치화를 만들어서 혼란과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왜 그런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두 분께서 치열한 공방을 펼쳐주셨고요.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종배 대표님, 만 18세부터 우리나라는 사회적 의무 그리고 각종 자격기준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에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18세면 군대도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회적 의무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왜 선거권은 부과되면 안 되느냐.

Q. 만 19세 성년으로 규정한 민법과 충돌 우려?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이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해업소 출입제한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 19세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응시 연령을 18세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투표권도 18세에 줘야 된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게 OECD 국가의 예를 드는 것과 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게 논리적 비약이고 고3 우리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저희가 핵심적인 논점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18세가 됐든 19세가 됐든 고3에게 투표권을 주기 때문에 18세 투표권을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그게 핵심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청소년 유해업소와 관련된 기준도 만 19세 미만.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그래서 17세 공무원 주니까 이것도 쥐야 된다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또 다른 현행법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4조 같은 경우에 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 19세라고 하는 것이 민법상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측면이 있을 때 만 19세에 성년에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하신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도 보면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일단 성년 기준과 관련해서는 성년 기준과 참정권 부여 연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성년 기준과 참정권 부여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성년 기준보다 참정권 기준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우리가 민주주의자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민주주의자의 태도지 어떻게 하면 조그만 핑계거리를 찾아서 반대할까를 고민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학업이 본분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 주시는데 저는 직장인들도 일을 하는 게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하러 정치에 관심 가지냐. 일단 열심히 해라. 실제로 선거일에 투표하러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그냥 어떤 학업, 대학입시 공부에 매몰돼야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이 기성세대의 생각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미 고3 학생들, 만 18세 청소년들 중에 대학입시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미 취업해서 노동하는 사람도 있고 특성화고 학생들, 탈학교 청소년들 이미 이런 다양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데 왜 자주 그런 어떤 학업이 본분이다 이 얘기만 반복하시는지 굉장히 답답합니다.]

2. 장단점 사례

추후 제시

3. 논의

한마디로 말하면, 만18세 이상 선거법 개정은 걱정반 기대반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표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물며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자신의 신중한 의견에 따라 투표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들일수록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선거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선거권

을 가지고 투표를 할 권리는 있다. 따라서 어릴 적부터 투표를 하게 되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떤 정치적 성향과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더 많이 가지게 됨으로써 실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선택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아마도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유권자들과 접촉의 문제에 있어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 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심리적으로 어려워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 시점이 예비후보자들이 등록한 100일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자신의 이름을 유권자들에게 많이 홍보해야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는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8일 처음 시작되어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2019-n-CoV)는 2달만에 2만명을 넘는 확진자 수를 보이며, 2002년 1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발생한 사스 바이러스 피해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보건당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료를 알리기까지 꽤나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들은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신종코로나가 더욱 확산되어 사람들이 근무지 이외의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띠었기 때문에 아예 선거운동을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V. 선거법 개정이 주는 시사점과 나아갈 방향

1. 시사점

무릇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느 한쪽으로 모두 치우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현장의 정치화가 가속화되어 평가르기를 통해 교육의 장이 교우관계 형성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 사고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아 왕따현상이나 님비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셋째, 정치적 성향의 행위가 자칫 성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념과 사상이 고착화되어 자신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교육현장이 정치의 현장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립화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섯째, 대학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어 학업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지고, 개인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나아갈 방향

이 이렇게 볼 때, 선거연령 저하로 인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당국은 아직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선거시기가 되면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이나 정당가입 등 학생의 관심이 없는 부분의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일부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직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된 청소년들이 너무 정치적인 흐름에 민감하면 교우관계, 지역감정, 세대차이, 집단우월주의 등 다양한 성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교육현장에서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넷째, 가정교육에서도 정치편향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표권을 가지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불협화음이 오랫동안 잔존하여 왔으나 가정에서의 건전한 토론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로 투표에 임할 수 있는 자존감과 주체성이 확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정치적 상황 판단을 통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정치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특정집단에 유리한 교육을 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까?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통해 투표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교우관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마음속에 우려로 남는다.